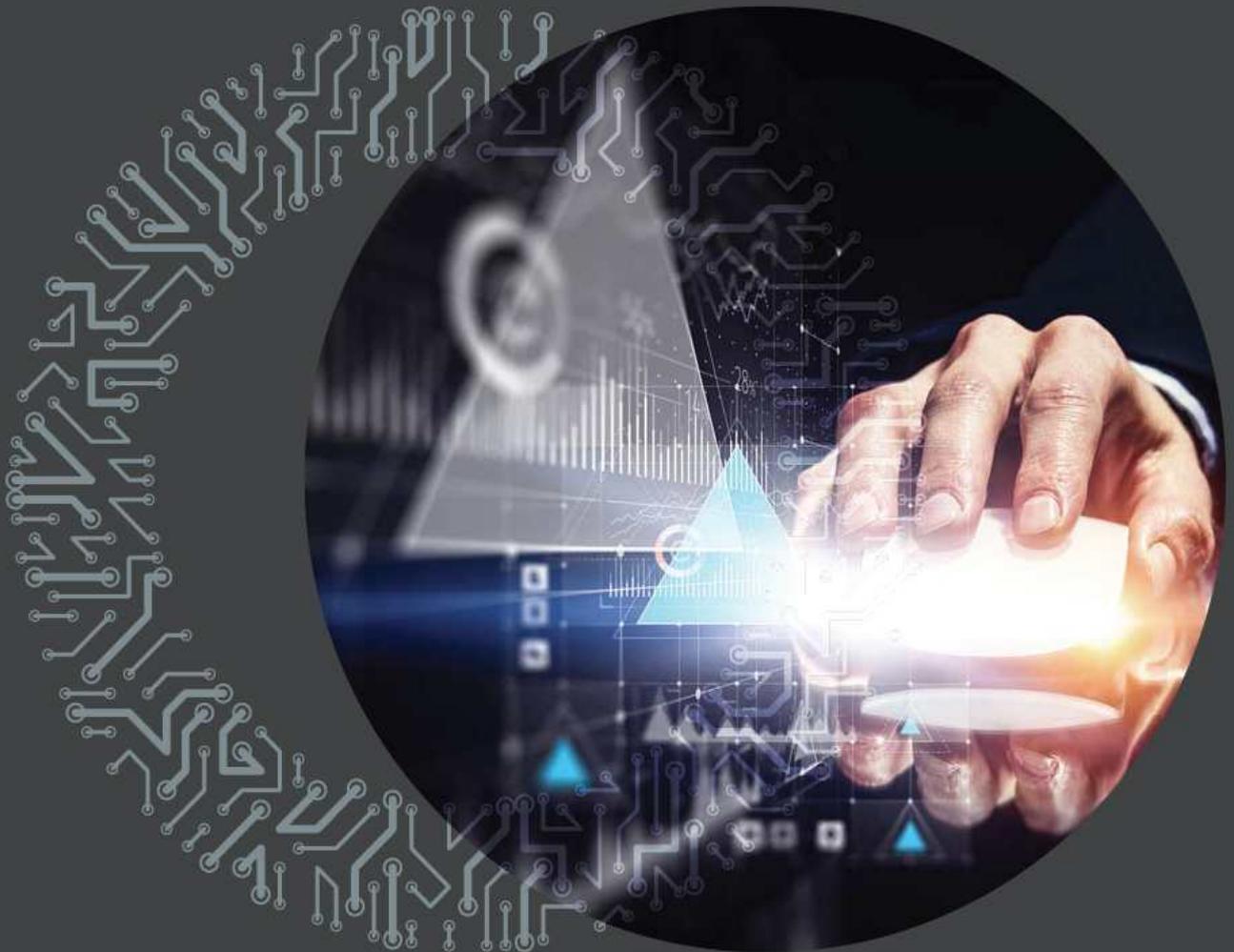


Insight Report

글로벌 메가경제공동체 시대의 ICT 정책

- 개방형 디코노미 정책 이슈 및 방향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
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4
I. 연구개요	7
II. 개방형 디코노미 개념 및 주요 이슈	10
1. 개방형 디코노미 개념 및 의의	10
2. 개방형 디코노미 주요 이슈	11
III. 대내·외 성장전망 분석	15
1. 경제성장 전망	15
2. 무역성장 전망	17
3. 국내 ICT산업 성장 전망	19
4. 소결: 글로벌 경제교역 전망 키워드	20
IV. 통상협정 현황 및 주요 내용	22
1. 우리나라 통상협정 현황	22
2. 통상환경 주요 이슈	24
3. 협정·협력 주요 내용: TISA, TPP, EU DSM	28
V.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ICT 정책수립 고려사항	36
1.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ICT 정책방향	36
2. 정책(안) 및 기대효과	37
참고문헌	43

요 약

□ 배경 및 필요성

- 개방형 디코노미(open diconomy) 축진이 경제성장·고용 등 글로벌 경제 문제 해결의 전제라는 인식 확산
- ICT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체계적 육성 정책이 필요하나 거시환경 급변에 따라 대응 이슈 발생
- 글로벌 관점의 거시경제 환경을 분석하여 개방형 디코노미 시대에 적합한 중·장기 ICT 정책 마련 필요

□ 목표 및 내용

- 격변기 우리 ICT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ICT 정책이슈 및 방향 제언
 - (1) 개방형 디코노미 개념 및 주요 이슈
 - (2) 2016년 경제·교역, 대내·외 성장전망 및 현황 검토
 - (3) 통상협정 현황 및 주요 내용
 - (4) ICT 정책수립 고려사항 제언

□ 개방형 디코노미 개념 및 이슈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상품,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국가 간 경계 없이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 사회
 - 디지털경제는 이론적으로 공간의 제약이 없으나, 현실에서는 각종 규범 및 규제 등 법률적 제약에 직면
 - 개방형 디코노미는 기존 개념을 국가 경계 없는 경제활동으로 확장한 것으로 통상협정을 통한 국가 간 컨센서스 확보가 중요
- 개방형 디코노미는 現 경제의 성장정체를 ①시장확대, ②효율화 및 ③차별화를 통한 新서비스 제공을 통해 타개
 - 디지털접근성 제고 규범 개선, 제조업 혁신, 핵심자원인 정보의 배타적 확보 및 시장참여자 이해관계 상충 사안 등 핵심이슈 점검 필요
 - 경제 전반의 거시흐름을 통해 추정해야 하는 연관 이슈의 특성상 대외경제 및 통상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한 우회적 검토 필요

□ 대내·외 성장전망 분석 및 현황

- (경제) 세계 3.3~3.6%, 국내 2.5~3.2% 성장률 추정('16년 기준)
 - 신흥 및 개발도상국 강점 분야인 제조부문 성장 모멘텀이 감소하고 전반적 경기가 선진국 중심으로 회복되는 추세
 - 우리 경제는 주요 수출 품목의 세계 시장내 위상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신흥·개발도상국 경기의 영향이 커 어려움 직면
- (무역) 세계 3.6~4.1%, 국내 2.3% 성장률 추정('16년 기준)
 - 수출 상위 3개국(中, 美, 獨)이 세계 총생산의 40.6%, 수출의 29.2%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G2(中, 美) 리스크 확대에 따라 변동성 증가
 - 우리의 경우, 반도체 및 무선기기 외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 부진 상태이며 공급과잉, 유가하락 등으로 수출 단가 역시 하락
- (ICT산업) 산업성장률은 '14년 3분기(2.3%) 이후 전체GDP 성장률을 밑돌다 '15년 3분기 회복('15년 분기별 0.1→0.0→6.5%)
 - 산업성장률, 무역수지기여율, 수출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담보가 어려운 상황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의 특정 품목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과다 및 경쟁심화로 성장세 유지를 예견하기 어려움
- (소결) ICT산업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충분한 내실 확보 없이 개방형 디코노미 환경 직면 시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 고부가가치영역에서 선진국 대비 경쟁열위, 저부가가치영역 경쟁 심화 및 대외환경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경제 하방위험 증가
 - 특정품목 위주의 수출 구도 고착화로 개방형 디코노미 급진전 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통상협정 현황 및 주요 내용

- (현황) 통상협정 및 경제협력 논의는 법·규범적 경계를 허물어 개방형 디코노미로의 경제환경 변화를 시행하는 전제
 - '16년, 통신 및 전자상거래 기반의 디지털 시장 활성화 관련 논의가 주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인바 신중한 대응 요구

- (이슈) 경제블록화 및 교차협정심화, 역학관계 변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및 비관세장벽 강화 등이 주요 이슈
 - 전략산업인 ICT 및 지역적 이점을 활용, 개방에 따른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상 정책 수립 필요
 - 복잡성이 증가하는 통상환경을 고려, 진일보한 협정조항 수용시 향후 표준규범화 될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망
 - 개방형 디코노미 진전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가치사슬 고도화 및 개방-보호 간 균형있는 전략 활용 필요
- (시사점) 現 통상협정은 관세인하·폐지를 통한 교역 증진 뿐 아니라, 성장 정체인 각국 수요의 실질적 확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협력
 -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ICBM 기반 신시장의 패권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어 시장개방 시기에 대한 미래지향적 검토와 대응이 요구

□ ICT 정책방향 제언

- 現 ICT 산업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나, 정책 방향 수립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제언함

정책방향	정책(안) 예시
개방형 디코노미 기반 마련	▶ 디지털접근성 제고를 위한 규범 개선
정보/고부가가치 기반 산업구조 혁신	▶ 정보확보 전략 수립 지원 ▶ ICT산업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 정보기술 R&D 추진 전략 및 정책 재정비
글로벌 규범 확립 지원	▶ ICT 통상정책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체계적 대응 지원

- 개방형 디코노미는 '16년 이후 전개될 한·일·중 DSM 논의 등과 더불어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 전략적 대처가 시급
 - 정책입안자, 시장참여자, 연구기관 등의 유기적 공조를 통한 구체적 전략 마련 요구

I. 연구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개방형 디코노미(open diconomy) 축진이 경제성장·고용 등 글로벌 경제 문제 해결의 전제라는 인식 확산
 - 국가 간 디지털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경쟁 촉진, 新산업 활성화 및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는 움직임 활발
 - 통상협정 및 경제협력 논의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통신·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데이터 교류에 관한 이슈 부각

그림 1 | 개방형 디코노미 개념



- 우리 정부 역시 다발적 통상협력 확대 및 ICBM* 산업 역량 강화 등 ‘개방’과 ‘디지털’ 고도화를 통한 디코노미 패권 확보 노력 진행 중
 - * ICBM: IoT,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 ‘15년 11월 한·일·중 DSM* 여건 조성 협력 선언을 통해 주변 주요국과 디지털시장 확대 논의 시작
 - * DSM: Digital Single Market, 디지털단일시장
- ‘16년 한·중·일FTA*, RCEP** 등 메가FTA***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CT 기반 서비스 및 융합시장 관련 이슈 부각
 - *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국가 간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 일종의 메가FTA
 - *** 메가FTA: 3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FTA

- 정부는 ICT 기반 미래성장동력 창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분야 지원 및 역량확보 강화*

* '과학기술·ICT 기반 창조경제가 미래 성장 동력', VIP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발언, 2016

* 'ICT를 활용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것',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년사, 2016

o 개방형 디코노미 환경에서 ICT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체계적 육성 정책이 필요하나 거시환경 급변에 따라 대응 애로 발생

- ICT 경쟁 기반이 미흡할 경우, 연관 산업 경쟁력 약화 및 무역역조* 현상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

* 무역역조: 수입>수출

** 現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로 꾸준한 대비 없이는 상황 전환 불가능

- ICT산업, 시장,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및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어 변화에 대한 이해 및 선제적 전략 수립을 통한 대응 필요

표 1

ICT 산업 거시환경 주요 변화

환경	내 용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융·결합 심화) ICBM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패러다임들이 기술·산업 간 전방위적 융·결합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격변기(激變期) ▶(ICT 범용화 진전) 환경, 제조, 에너지, 금융 등 ICT 활용 범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연관 산업 역시 자동차, 농업 기기 등으로 무한하여 경계 규정 무의미 ⇒융합화 및 범용화 심화에 따라 기존 산업 분류 및 육성 정책과 괴리 확대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노멀 도래)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으로 대변되는 뉴노멀(New Normal) 현상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 확대 ▶(글로벌 경쟁심화) 제조업 국내화 전략, 전방위적 영역의 부가가치 생산 등 실업을 타파하고,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한 각국 정책·전략 수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경쟁 치열 ⇒글로벌 관점의 정책대응 요구 증가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보호 간 이해 상충)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개방 활성화 이면에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통상 복잡성 가중) 통상정책이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적 교류 및 결합을 포함하며 의미를 확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필요 ⇒통상협정에 따른 글로벌 규범의 국내법·규범 수용 요구 증가

o 글로벌 관점의 거시경제 환경을 분석하여 개방형 디코노미 시대에 적합한 중·장기 ICT 정책 마련 시급

- ICT 관련 거시 경제 동향을 종합 분석하여 정책 의사결정자 및 관련 업계 이해 제고 필요

- 분석 결과 기반으로 격변기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이슈 분석

- 개방형 디코노미 관점의 정책 고려사항 검토 필요

② 목표 및 내용

- (목표) 격변기 우리 ICT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ICT 정책이슈 및 방향 제언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본고는 다음 내용을 포함
 - (1) 개방형 디코노미시대 ICT 산업 환경
 - (2) 2016년 경제·교역 전망 및 시사점
 - (3) 주요 통상협정 내용 및 ICT 이슈
 - (4)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ICT 정책 제언

그림 2

분석 흐름



- *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다자간 서비스협정
-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 EU DSM: EU의 Digital Single Market, 디지털단일시장 전략

③ 결과 활용시 유의점

- 본 분석은 거시경제 전반의 성장 지표와, 최근 부각되는 통상 이슈를 연계하여 ICT 부문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
 - 분석 결과는 다양한 패러다임 내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경제환경의 변화를 “개방형 디코노미” 프레임에서 해석
- 거시 경제 지표 및 통상 현황 분석 시, ICT 분야에 초점을 두어 제공 정보가 제한
 - 타분야 상세 내용은 원 자료 확인 요망

II. 개방형 디코노미 개념 및 주요 이슈

1] 개방형 디코노미 개념 및 의의

- (개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상품,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국가 간 경계 없이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 사회
 - 과거, 기술, 정보 등을 디지털화 하던 1차원적 변화가 아닌, ICBM 산업을 동력으로 데이터 수집·분석 후 새로운 가치 생산 및 활용
 - 국가 간 자유무역·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개방된(Open)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로 기존 디지털경제가 국제 간 관계로 확장

표 2

개방형 디코노미 유사 개념 및 차이

- ▶ 기존 디지털경제, 인터넷경제, 사이버경제 등 여러 유사한 용어들이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혼용
- ▶ 디지털경제는 이론적으로 공간의 제약이 없으나, 현실에서는 각종 규범 및 규제 등 법률적 제약에 직면
- ▶ 개방형디코노미는 기존 디지털경제의 개념을 국가 경계 없는 경제활동으로 확장한 것으로 통상협정을 통한 국가 간 컨센서스 확보가 중요

구 분	내 용
디지털경제	▶ 정보기술 생산산업(IT-producing industries), 정보기술 이용산업(IT-consuming industries),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산업을 포함(김기홍, 2014)
인터넷경제	▶ ICT산업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각종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 영역을 포괄(손상영외, 2000)
사이버경제	▶ 인터넷의 연결로 정보의 교환 및 공유가 이루어지는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

- (현황) 디지털경제는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으나, 국경을 허문 통상 기반 개방형 디코노미는 최근 부각
 - ICBM 기반 新산업의 헤게모니(hegemony)를 주도하는 기업이 특정 되지 않아, 통상협정 및 정책 향방이 주목되는 상황
 - 무한 경쟁 환경에서 기회 선점을 위한 전략적 산업 육성이 시급하며, 관련 이슈 및 논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의의)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 소비를 연계한 전통 경제의 한계를 넘어 무한 생산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기반 경제 체계
 - 제조, 서비스업을 구분하던 기존 경계를 넘어 금융, 교통, 헬스케어 등 경계 없는 가치를 창출

- 기업의 사업 환경 뿐 아니라, 소비자 역할 및 생활을 포함,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
-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글로벌 권역에서 수행되므로 물리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디코노미 구현

② 개방형 디코노미 주요 이슈

- 개방형 디코노미는 現 경제의 성장정체를 ①시장확대, ②효율화 및 ③차별화를 통한 新서비스 제공을 통해 타개할 수 있는 개념
 - 글로벌 연결성을 확보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 수집 후 이를 구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 시장확대
 - ICT를 활용한 기술혁신으로 상품제조, 배송에 이르는 오프라인 시장 전반의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경계 파괴
 - ICBM 기술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제품, 서비스 차별화 및 경쟁 확대
- 다만, 국가 간 통상협정을 통한 실무 협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담보
 - 대외경제 및 통상협정 전개 양상에 따른 영향이 크며,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내실↔외형 확대 간 계획있는 균형 유지 필요
 - 과거 ICT산업의 先경쟁력 확보→後해외진출 고려가 아닌, 시작 단계 부터 글로벌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
-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및 효용 증가가 예상되나 국가 산업 관점에서 충분한 준비없이 디지털 시장이 개방될 경우 산업 기반 약화 우려
 - 개방을 통한 시장확대와 더불어 연관 산업 내 효율화 및 차별화 전략이 충분히 시행되었는지 점검할 필요
 - 점검을 통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 다음은 개방형 디코노미 시대에 우선적으로 살펴야할 4대 이슈를 선정하여 간략히 제시
 - ①시장확대 : 국가 간 디지털접근성 제고를 위한 규범 개선
 - ②효율화 : 제조업 혁신을 통한 단위 단가 최적화

- ③차별화 :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반인 정보의 배타적 확보
- ④기타 : 개방화 진전에 따른 시장참여자 이해관계 조율

[이슈 ①] 국가 간 디지털접근성 제고를 위한 규범 개선

- o (현황) 디지털 기반인 온라인 시장은 물리적·공간적 제약이 없지만, 그간 법·제도 등 규범 미비로 인해 오프라인 대비 체감 제약이 큰 편
 - 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콘텐츠 등 재화를 온라인 규범 미비로 차단당하는 경우 빈번
 - * 실제로, 경제통합이 진행된 EU 역내에서도 온라인 통합은 별도 논의가 필요
 - 상품시장 관련 사항은 제도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서비스 시장은 성장 가능성 및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간 협의 지연
 - o (개방형 디코노미 환경) 통상 협정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한 국가 간 디지털 상품 및 재화 접근성 제고 노력 활발
 - 디지털접근성 제고를 통한 ICBM 기반 新산업 활성화에 대한 국가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무 논의(예. TISA, DSM 논의 등) 전개
- ⇒ 통상협정 논의 현황 점검 대응 전략 수립 필요

[이슈 ②] 제조업 혁신

- o (현황) 인건비, 물류비 등 제조 물품 단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단가 인하만으로는 경쟁우위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기존 제조업의 주요 과제가 재료비 및 경비절감에 있었다면 최근 추세는 제조업 자체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혁신의 시기
 - 효율화 요구와 더불어 제조 품목 자체의 변화가 요구됨
- o (개방형 디코노미 환경) 하드웨어 가격경쟁을 통한 유통 마진 확보가 아닌, 공급 후 수집된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파생 산업 중심
 - 디코노미 시대의 가치는 디바이스 이용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를 통해 데이터 수집 후 진행되는 2차 산업 이상에서 발생
 - 개방화로 무한 경쟁이 도입된 경제 구도에서 데이터 수집에 최적화된 고효율 플랫폼 제공이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

- 하드웨어 공급은 데이터라는 사업 기반 확보를 위한 회피 불가능 투자(unavoidable investment)가 될 것
 - 개방형 디코노미 진전에 따라 센서, 카메라 등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부품 및 접속 디바이스 시장 규모는 확대 예상
 - 다만, 디바이스가 가치 생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방으로 인해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단위 마진은 하락
 - 디바이스 제조업과 데이터 수집·저장·분석·응용 산업 접목을 통한 영역 확장 및 新산업 창출 기반 확보 필요
- ⇒ 디바이스 공급형 제조업의 경우, 단순한 단가 인하를 위한 효율화 전략이 아닌, 사업 체질 개선 및 공정 전반의 혁신 전략 필요

[이슈 ③] 배타적 정보 확보

- (현황) 디지털사회에서 정보가 곧 경쟁력으로 자리한 상황이나, 정보 기반의 시장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
 - ICBM을 기반으로 기술의 총합인 인공지능 구현 및 이의 활용을 통한 新산업 창출 노력 가속화
 - 디지털 공간에 파편화된 정보를 종합하여 수요창출형, 고부가가치형 제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기업 간 경쟁 심화
- (개방형 디코노미 환경) 주요 산업이 개인, 사회 등이 생산한 데이터에 기반할 것이며, 가치있는 정보의 배타적 확보가 산업의 기초 경쟁력
 -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수요 최적화 서비스 제공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개방형 디코노미의 헤게모니(hegemony)를 주도
 - 기존 디코노미 논의가 산업의 디지털화 그 자체에 있었다면, 개방형 디코노미는 국가 간 디지털 재화의 이동을 전제하여 파급력 확산
 - 데이터 수집·분석·저장·응용에 이르는 디코노미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 간 M&A, 국가 간 경제 협력 등 전방위적 합종연횡 확산
- ⇒ 가치있는 정보를 글로벌 관점에서 가능한 배타적으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

구 분	내 용
원격지 데이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컴퓨팅 확산에 따라 데이터 저장 공간의 제약이 사라짐 ▶ 과거, 신흥·개도국 시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장비를 현지에 위치하게 하거나, 투자를 전제로 산업 내 참여권을 부여하였으나,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 상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만 원격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책요청 빈번 ⇒ 현지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감소한 디코노미 환경에서는 선진국에 대한 신흥·개도국의 투자요구 당위성 역시 감소
초연결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위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자동차·웨어러블기기·가전 등 모든 디바이스와 서비스 연결을 위한 기반 확보 가속화 ▶ 글로벌 기업인 구글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포함 10여개의 로봇업체를 포함, IoT 기업 등과 다발적 M&A 진행 ▶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초연결 기반 확보를 위해 IoT 등에 R&D 지원 확대 및 불필요한 규제 정비 진행 ⇒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 전략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
연관 사업모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데이터의 확보가 경쟁력을 의미하면서 배타적 정보 확보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전개 노력 확대 ▶ 일례로, ICT+의료 융합 기기인 다빈치수술로봇의 경우, 수술을 통해 발생한 모든 데이터는 본사에 집적. 오프라인으로는 업데이트도 어려운 상황으로 공급사인 미국 인튜이티브 서지컬(Intuitive Surgical) 사가 정보의 포식자로 위치

[이슈 ④] 개방화에 따른 시장참여자 이해관계 조율

- (현황) 전통적인 산업 구조가 가진 기업(생산)→소비자(소비) 간 뚜렷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시장 참여자 역할이 다변화됨
 - (소비자) 과거, 인터넷 접속을 통해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던 소비자가 스마트기기를 활용 데이터 생산 및 재유통까지 역할 확대
 - (사업자) 제조업-서비스업, 콘텐츠사업-통신서비스제공업 등 사업영역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데이터 기반의 종합형 사업 확대
- 생산자 간, 생산자와 소비자 간 등 가치 창출 주체 구분이 어려워,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상충하거나 이해관계 대립 빈번
 - 개인이 생산하는 다양한 데이터 중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와,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정보 간 경계 선정 등 이슈 발생
- (개방형 디코노미 환경) 개방 진전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시장참여자 간 이해 대립 구도가 국가 간 관계로 전이·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인공지능 등 新기술을 활용한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정보 소유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문제 선결 필요

III. 대내·외 성장전망 분석

1] 경제성장 전망

□ 세계

- '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3~3.6%로 '15년(2.9~3.1) 대비 회복세가 예상되나, 신흥·개도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회복 폭은 제한
 -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는 '14년 이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중국 등 신흥 개도국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
 - 세계 경제를 이끌던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미국의 기준 금리인상(G2 리스크) 등으로 환율, 자금흐름 등의 변동성 확대

표 4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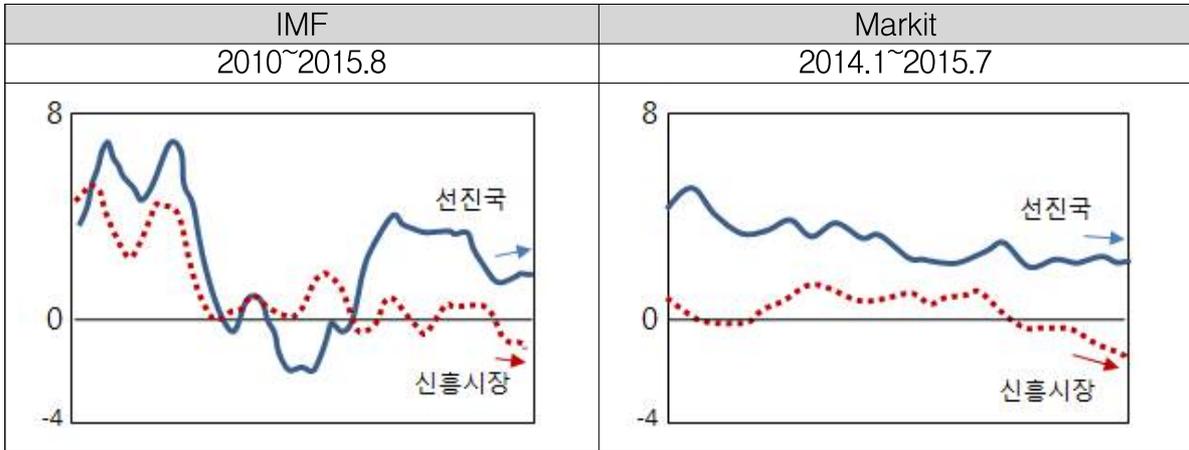
발표기관 (전망시점)	구 분	2014	2015 ^e	2016 ^e
IMF (15.10)	▶세 계	3.4	3.1	3.6
	▶선진국	1.8	2.0	2.2
	미국	2.4	2.6	2.8
	▶신흥 시장 및 개도국	4.6	4.0	4.5
	아시아권 신흥·개도국	6.8	6.5	6.4
	중국	7.3	6.8	6.3
	인도	7.3	7.3	7.5
	ASEAN-5 ¹⁾	4.6	4.6	4.9
OECD (15.10)	▶세 계	3.3	2.9	3.3
	▶OECD 국가	1.9	2.0	2.2
	미국	2.4	2.4	2.5
	▶非OECD 국가	4.7	3.7	4.2
	중국	7.3	6.8	6.5
	인도	7.3	7.2	7.3
	인도네시아	5.0	4.7	5.2

※ World Economic Outlook: Adjusting to Lower Commodity Prices, IMF, 2015.10
 ※ Economic Outlook No.98: Press Conference, OECD, 2015.11.9

- PMI²⁾ 지수 기준, 선진국 제조업분야 경기는 회복추세에 있는 반면, 신흥시장의 경우 점진적 경기 수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금융위기 후,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진국의 리쇼어링* 전략 등으로 신흥 및 개발도상국 강점 분야인 제조부문 성장 모멘텀 감소
 - * 리쇼어링(re-shoring) : 해외 진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

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5개국

2) 제조업 분야 경기동향지수로 경기 움직임을 포착하는 경기선행 지표로 활용



※ World Economic Outlook: Adjusting to Lower Commodity Prices, IMF, 2015.10
 ※ Markit Global PMI/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5. 10 (인용, 수정재인용)

□ 국내

- '16년 성장률은 기관별 2.5~3.2%로 차이가 있으나, 메르스 등으로 수요가 침체되었던 '15년(2.4~2.7%)대비 나은 성장세를 보일 것
- 전망치 격차는 세계 경제가 내포한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각 기관의 시각차에 따른 것으로 추정
- * G2 리스크, 유가하락, 중국경제 성장률 등

표 5

국내 시장성장률 전망 (%)

발표기관 (전망시점)	2015 ^e	2016 ^e
한국은행 ('15.10)	2.7	3.2
기획재정부 ('15.12)	2.7	3.1
KDI ('15.12)	2.6	3.0
LG경제연구원 ('15.12)	2.6	2.5
한국경제연구원 ('15.9)	2.4	2.6

※ 각 기관 경제전망 발표 자료

- '15년, 우리 경기 둔화는 내수침체 외에도 경쟁국 추격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및 대외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전반적 수출 감소가 원인
- '15년 하반기 내수시장 회복으로 경기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신용 경색 등 불안요인으로 인해 지속가능 여부 불투명
- 특히 수출을 견인하던 10대 주요 수출품목*의 세계 시장 내 위상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어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 * 10대 품목: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공품, 석유제품, 기계류, 철강제품, 선박,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 **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5. 10

② 무역 성장 전망

□ 세계

- '16년 세계 무역성장률은 3.6~4.1% 규모 성장이 전망되어 부진했던 '15년(2.0%~3.2%) 수준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6 세계 무역 규모 전망 (전년대비, %)

발표기관 (전망시점)	구분	2014	2015 ^e	2016 ^e	
IMF ('15.10)	▶ 세계	3.3	3.2	4.1	
	수입	선진국	3.4	4.0	4.2
		신흥·개도국	3.6	1.3	4.4
	수출	선진국	3.4	3.1	3.4
		신흥·개도국	2.9	3.9	4.8
OECD ('15.10)	▶ 세계	3.4	2.0	3.6	

※ World Economic Outlook: Adjusting to Lower Commodity Prices, IMF, 2015.10

※ Economic Outlook No.98: Press Conference, OECD, 2015.11.9

- 세계 5대 수출국*이 수출·입의 36%, 수출액 상위 3개국이 세계 총생산의 40.6%, 수출의 29.2%(5조 3,823억불)를 점유하는 집중도 높은 구조

* 5대 수출국: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표 7 세계 10대 수출국 수출입 및 무역의존도 현황 (억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1월~9월)		
	명목 GDP ^a	수출액 ^b	수입액 ^b	수지	수출 의존도	무역 의존도	수출액 ^c	수입액 ^c	수지
세계	778,688	184,235	187,678	-3,443	23.7	47.8	123,983	122,688	1,295
1. 중국	103,601	23,432	19,631	3,801	22.6	47.6	10,731	8,091	2,640
2. 미국	174,190	16,205	23,477	-7,272	9.3	22.8	17,344	11,336	6,008
3. 독일	38,526	14,186	12,028	2,158	36.8	68.0	6,632 ^{N/A}	5,255 ^{N/A}	1,378
4. 일본	46,015	6,902	8,122	-1,220	15.0	32.7	4,919	4,696	223
5. 네덜란드	8,695	6,572	5,857	716	75.6	142.9	3,534	3,135	399
6. 한국	14,104	5,727	5,255	471	40.6	77.9	3,968	3,305	663
7. 프랑스	28,292	5,697	6,637	-940	20.1	43.6	2,503 ^{N/A}	2,837 ^{N/A}	-333
8. 이탈리아	21,443	5,215	4,511	704	24.3	45.4	2,302 ^{N/A}	2,098 ^{N/A}	205
9. 홍콩	2,909	4,740	5,449	-710	162.9	350.3	2,217	2,530	-313
10. 영국	29,419	4,619	6,530	-1,911	15.7	37.9	3,254	4,633	-1,378

※ a.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 K-stat 수출입 통계(<http://stat.kita.net>)

c. Monthly tables of imports and exports, UN statistics Division (<http://unstats.un.org/>)

N/A. 2015.년 12월 28일 기준 자료 미공개, 하단 1~6월 통계 기재

- 따라서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내수 위주 성장정책 등 주요국 정책 및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 무역성장률 역시 증감할 것
- '16년 성장률 회복 예상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자체는 추세적 하락 상태이며 교역 구조, 품목, 단가 등 전반적 구조 변동이 예상됨

□ 국내

- '16년은 경기회복과 함께 수출·입 규모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에 비해 수입규모 개선이 클 것으로 전망
 - '15년 반도체 및 무선통신기기 외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 부진을 보였으나, 내수침체로 무역수지 흑자는 큰 폭 확대
 - 글로벌 공급과잉 및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 단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수출 품목 다변화에 대한 지속 점검 필요

표 8 | 국내 무역 규모 전망 (전년대비, %)

발표기관 (전망시점)	기준	구분	2014	2015 ^o	2016 ^e
한국은행 ('15.10)	물량	상품수출	2.3	0.2	2.3
		상품수입	1.2	0.9	1.8
KDI ('15.12)	물량	총수출	2.8	0.0	1.8
		총수입	2.1	2.4	2.9
		상품수출	2.3	-0.4	1.3
		상품수입	1.2	1.0	2.7

※ 각 기관 경제전망 발표 자료

- 한국은 세계 6위 수출국(세계 수출의 3.11%, '14년 기준)으로, 수출의존도 40.6%, 무역의존도 77.9%에 달하는 통상 중심국
 - 수출 기준 상위 10개국 중, 무역의존도가 홍콩(350.3%), 네덜란드(75.6%)에 이어 3위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
 - * 일반적으로 국가면적이 좁을수록 무역의존도는 높은 경향
 - 특히 중국(26%)과 미국(13.2%) 수출 의존도가 높아 G2 리스크 확대에 따른 교역 상황의 변화가 예상됨
 - 경제 개방의 정도가 높고, 대외 경기 변동에 따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통상협정 시 신중을 기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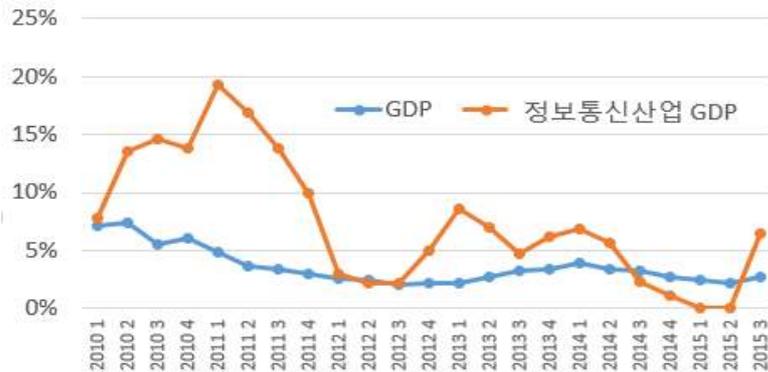
③ 국내 ICT 산업 성장 전망

○ ICT 산업 성장률은 '14년 3분기 이후 전체 GDP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15년 3분기 이후 회복*(전년 동기대비, %)

* 성장률 추이(% ,분기): 2.3('14/3), 1.1('14/4), 0.1('15/1), 0.0('15/2), 6.5('15/3)

- '15년 3분기 반등하였으나, 장기적인 추세는 하락세 유지

그림 4 ICT 산업 GDP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 한국은행 경제통계

○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를 포함한 ICT 부문 설비투자는 '15년 내 분기 3~4%대를 유지(전년 동기대비, %)

- 최근 ICT 부문에 요구되는 혁신의 강도 및 역량 제고 요구 대비 관련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5 ICT 산업 GDP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 한국은행 경제통계

○ ICT 산업 수출은 전체 산업 수출(5,727억불, '14년 기준)의 30.8% 비중을 점유하며 881억불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창출

- 우리나라 무역을 이끄는 견인차로 무역수지 흑자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나, 흑자규모의 추세적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

- '15년 1~3분기 누적 무역수지는 622억불 규모로 '14년 무역수지의 70.6%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연간 무역수지는 전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

표 9 | 세계 무역 규모 대비 한국 ICT 비중 (억달러, %)

구분	세 계 ^a		한 국					
			(세계 대비 비중)			(ICT ^b 대비 비중)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지	수 출	수 입	수 지
2015 1~9월	123,983 ^b	122,688 ^b	3,968 ^a (3.20)	3,305 ^a (2.69)	663	1,295 (32.6)	673 (20.4)	622
2014	184,235	187,678	5,727 (3.11)	5,255 (2.80)	471	1,762 (30.8)	882 (16.8)	881
2010	149,374	153,316	4,664 (3.12)	4,252 (2.77)	412	1,539 (33.0)	756 (17.8)	783
2005	103,927	107,588	2,843 (2.74)	2,612 (2.43)	231	1,083 (38.1)	593 (22.7)	490
2000	63,775	65,822	1,723 (2.70)	1,605 (2.44)	118	672 (39.0)	444 (27.6)	229

※ a. K-stat 수출입 통계(<http://stat.kita.net>)
 b. 2015년 11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 미래창조과학부

- o ICT 수출의 73.3%를 반도체(36.4%), 디스플레이(18.9%), 무선통신기기(18.0%)가 차지하고 있어 특정 품목이 전체 수출을 견인
- '16년 경쟁심화 및 단가하락 등으로 주력부문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

표 10 | 2016년 ICT 분야 주요 품목 수출 전망 (억달러, 전년비%)

품목	2015 ^e		2016 ^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642	2.5	625	-2.6
디스플레이	305	-5.7	298	-2.3
무선통신기기	332	12.2	339	2.1

※ 2015년 수출입 평가 및 2016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2015. 11

4 소결 : 글로벌 경제·교역 전망 키워드

- o 경제·교역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은 우리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
-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성 확대, 중국 경제의 연착륙 등 거시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
- 제조업을 성장 기반으로 삼기위한 선진국의 리쇼어링 전략은 전통적인 선진국-신흥·개도국 간 고-저부가가치 영역 분담에 변화 유발



- 선진국은 신흥·개도국과 전방위적 영역에서 경쟁함으로써 경쟁을 심화하고, 신흥·개도국은 선진국의 시장 개방 요구에 대응하는 양상
 - 우리는 선진국과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경쟁하고, 여타 신흥·개도국 대비 나은 기술력으로 중·저부가가치 영역에서 경쟁하였으나,
 - 고부가가치 영역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신흥·개도국과의 기술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등 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한계 발생
- 특히 주 교역 대상국인 신흥·개도국의 성장세 둔화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기반 약화를 의미
 - 통상협력을 통한 교역 시장 확대 및 전략적 협력을 제고, 글로벌 수출 수요 확보 노력 전개 필요
- 우리 ICT 산업 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며, 과거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제를 견인하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과다 및 경쟁심화로 성장세 유지를 예견하기 어려움
 - 무역수지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줄고 있어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 약화 우려 심화
 - 특정품목 위주의 수출 구도 고착화로 개방형 디코노미 급진전 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ICT 산업이 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산업육성 전략 마련 시급

IV. 통상협정 현황 및 주요 내용

① 우리나라 통상협정 현황

□ FTA 체결 현황

- '15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총 14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16년 다수의 메가FTA* 협상에 참여 예정

* 메가FTA: 3개국 이상 국가가 참여하는 FTA

- '15년 12월 20일,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및 한·캐나다 간 FTA가 발효되었으며, '16년 본격 활용

표 11

한국 FTA 체결 현황

진행단계	건수	상대국
발효	14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기본 및 상품무역협정),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타결	2	콜롬비아, 터키(서비스/투자협정)
협상진행	4	한중일, RCEP, 중미, 에콰도르 SECA
협상 재개 여건 조성	4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GCC
협상 준비 연구	3	MERCOSUR,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산업통상자원부

※ 용어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4국)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아랍산유국간 지역협력 기구

MERCOSUR(Southern Common Market의 스페인어 약자): 남미공동시장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

□ '16년 참여예정 주요 협정

- WTO 복수국간협정 협상 중 TISA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 ICT 융합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이 주 이슈로 논의
- '16년 메가FTA 중심의 FTA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아·태 지역 내 한·중·일 3국 참여 논의가 많아 참여국 간 컨센서스 확보 필수
- 통상협정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15년 선언된 한·일·중 DSM 여건 조성 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중·일FTA, RCEP, FTAAP의 경우, 한·일·중 DSM 논의를 포함 3국 경제적 협력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

- 유사 국가가 다수 통상협정에서 협력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복잡성 증가에 따른 비용과 효익을 감안하여 신중한 협상 진행 필요

표 12

'16년 발효 및 협상예정 WTO 복수국간 협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ITA	▶ '15.12.16 확대협상 타결 ▶ '16.7.1 관세인하 및 철폐	▶ 기존 ITA의 미포함 품목 201개(HS6 단위에 대한 관세가 2016~202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 ▶ ITA 확대협상 품목에 IT 연관제품들이 포함
TISA	▶ '16. 상반기까지 3차례 협상개최 예정	▶ 금융, 국내 규제와 투명성, 통신, 전자상거래, 인력 이동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노력 지속

※ Trade Brief. No.66, 한국무역협회 참고 정리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해당분야 무관세 협정

표 13

'15~'16년 주요 메가FTA 추진 내역

FTA	참여국 및 특이사항	추진현황
한·중·일	▶ 한국, 중국, 일본	'15.4 7차 실무협상 '15.7 8차 실무협상 '15.12 9차 실무협상
RCEP	▶ 한국, ASEAN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15.2 7차 협상 '15.6 8차 협상 '15.8 9차 협상 '15.10 10차 협상 '16년 말 타결 목표
FTAAP	▶ APEC 21개국 ▶ 한국은 중국주도 FTAAP 실현 지지	'15.11 베이징로드맵 합의 '16년 말까지 공동전략연구수행
TPP	▶ 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2개국 ▶ 한국 참여의사 표명 단계	'15.10 협상 타결 '15.11 협정문 공개 '16년 초 정식서명 예상

※ Trade Brief. No.66, 한국무역협회 참조 재정리

※ 무역뉴스, 한국무역협회 참조 재정리

- o '16년 논의 내 통신 및 전자상거래 기반의 디지털 시장 활성화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으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됨
- 현재의 통상협정은 관세인하·폐지를 통한 교역 증진 뿐 아니라, 성장 정체인 각국 수요의 확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협력
-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ICBM 기반 신시장의 패권 다툼이 가열화 되고 있어 시장개방 시기에 대한 미래지향적 검토와 전략적 대응 필요

⇒ 통상협정 및 경제협력 논의는 개방형 디코노미로의 이행을 실효화하는 전제로 법·규범적 경계 제거

② 통상 환경 주요 이슈

1. 지역주의 · 메가FTA 기반 경제블록화 심화

- '95년 WTO 출범을 전후하여 지역주의 기반 무역협정 체결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추정
 - '15년 11월 4일 기준, RTA 발효건수는 총 404건으로, 이 중 87.6%인 354건이 '95년 이후 발효

표 14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구 분	1958-1994	1995-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4	계
발효건수	50	49	82	127	96	404
비 중	12.4	12.1	20.3	31.4	23.8	100.0
	12.4	8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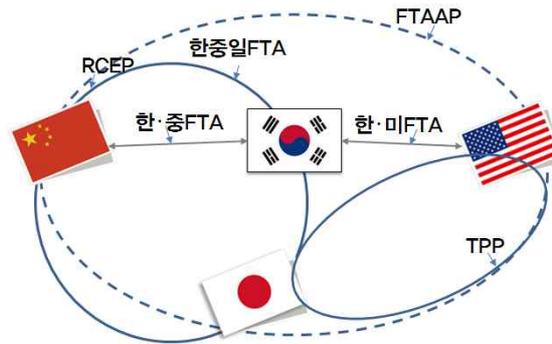
※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2015.1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지역주의는 국가 이익 극대화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자간 협상에서 다자간 메가급 협정이 부각되는 추세
 - (다자주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의 글로벌 규범 및 기반 개선을 위해, 자유무역, 비차별, 다자간 최혜국 대우 등 가치 추구(WTO 중심)
 - * 협상지연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진행이 더디고,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았음
 - (지역주의) 국제무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협정 의사를 가지고 참여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며,
 - 장기 불황을 타개하고 불안한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조치, 경제적 이익 추구의 발로로 부각
- 최근 메가FTA는 역내 국간 경제발전 정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는 양상
 - 아·태 지역 경제규모 성장으로 성장침체기인 선진국 시장을 대체할 소비시장으로써 가치가 증가한 것이 주원인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면서 아·태 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 지역 경제 협력을 통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
 -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확대에 따른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 필요

2. 교차협정 증가로 인한 교역 비용 증가

- 전 세계 교역은 양자간 FTA가 급속히 확대된 가운데, 경제권역 및 이해관계에 따라 메가FTA를 형성하고 있어 교차 참여 확대

그림 7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간 중복협정 현황



-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 메가FTA 포괄 국가 범위 차이 등으로 인해 다수의 FTA가 교차되는 다중 협정 구조를 띠
- 일례로 참여국의 범위, 협상의 목표 및 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나, 양자 간 관점에서 4종의 한↔중 협정이 진행되는 상황
- 중복적 협정참여로 인한 비용 및 복잡성 증가*로 인해 통상협정 참여 검토 여부 및 시기 조절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됨
 - *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및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 당초 기대한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
- 통상협정의 복잡성이 임계점에 달할 경우, 협정 간 점진적 통합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진일보한 협정이 표준 규범으로 적용 될 수 있음
 - 따라서 협정 체결시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되, 선행 협정과의 동조성 및 타 국가에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한 종합 접근 필요
 - 新산업의 경쟁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전략산업 및 新산업 조향이 급변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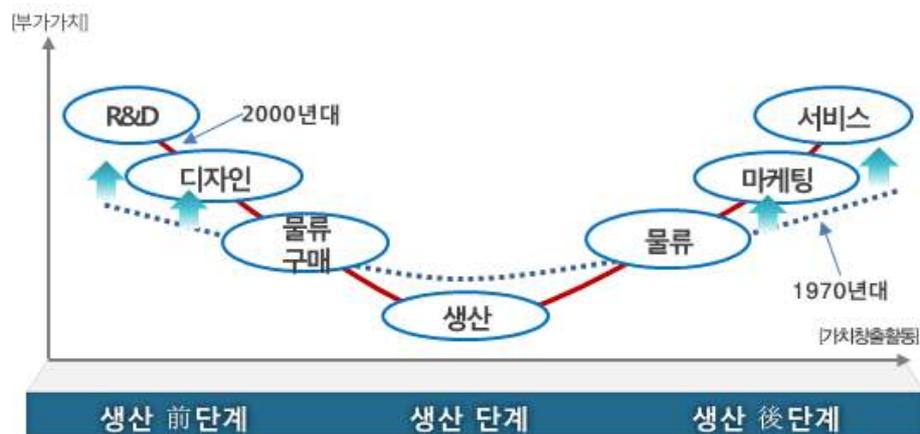
3. GVC(Global Value Chain) 구조 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 필요

- 통상 확대로 관세 등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중간재 교역, 외국인 투자 등이 촉진되고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심화

※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발전과제, KIET, 2014.12.

- 제품·서비스 생산시 필요한 생산 단계들이 분화되어 다수 국가에서 수행되는 GVC 심화로 인해 무한 경쟁 도입 효과 발생
 - 경쟁 열위 부문의 경우, 글로벌 기업에 급속히 분할, 편입될 수 있으며 GVC에서 급격한 도태 가능
- 아·태 권역의 활발한 통상 논의는 생산, 교역 및 투자 전 분야에 GVC 효과를 활용하려는 주요국의 전략적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결과
- 성장기 선진국은 생산 전 과정을 재구조화(restructring) 하는 과정에서 底가치 영역을 오프쇼어링*(off-shoring) 하여 효율 극대화
 - * 기업이 경비절감을 위해 생산, 용역, 일자리 등을 해외 이전하는 현상
 - 아·태 권역 국가들은 주요 산업분야의 부품 및 원자재 공급, 최종재의 조립 공정 등을 담당하면서 GVC에 편입
 - 따라서 과거 아·태 권역 국가들은 선진국의 주요 오프쇼어링 대상 국가이자 제품판매 시장으로 부각되었으나,
 - 최근 선진국 제조업 국내화 전략에 따라 소비 시장의 역할 중점 부각

그림 8 |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및 활동별 부가가치



※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Industry Globalization, 2013, OECD (수정 인용)

4. 비관세장벽 강화

- 통상협정 시 각국이 처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런 일련의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정의

- 과거에는 관세율 조정을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 보호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최근 통관, 표준, 인증,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이 확대

표 15 | 연간 TBT 통보 건수

연도	'95~'97	'98~'00	'01~'03	'04~'06	'07~'09	'10~'12	'13~'15
건수	1,737	2,012	2,096	2,658	4,673	5,845	6,150

※ TBT notifications within each 3 review period, WTO

- 비관세장벽은 특히, 제도, 법령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파악이 어렵고 복잡하여 개선 의지가 있어도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음

표 16 | '14년 기준 우리 통상 무역장벽 사례

유형	무역장벽	주요내용	상대국
통관절차상 제한	▶ 반덤핑률 산정기법 (제로잉 기법 적용)	▶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정상가격인 경우 (-)가 아닌 '0'으로 계산, 고율의 반덤핑 관세 산출	미국
무역상 기술장벽 (TBT)	▶ 별도의 자료없이 사용 가능한 자외선 차단효과 성분 수 제한	▶ 한국, 일본,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성분 규제	미국
	▶ 타이어 E마크 및 인증번호 표기법	▶ 새로운 인증이 지속 도입되는 상황에서 인증마크를 타이어에 몰딩방식으로 각인표기토록 하고 있어 번호 변경시마다 몰딩 제작 필요	EU
	▶ 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법	▶ 6가지 독성화학물질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이 제한되며, 유해물질 포함제품은 유독물질 명칭 및 회수이용가능 표시	중국
서비스 장벽	▶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 문화콘텐츠 관련 8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 게임분야 역시 인터넷문화경영 항목에 해당되어 외국인 투자금지	중국

※ 무역장벽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일부 발췌 정리)

-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수입 억제 시도 가능
- 이러한 행위를 新보호주의 무역으로 정의,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
- 비관세 장벽이 높을수록 통상협정 타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성,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통상협정 난이도 증가
- 대외 비관세 장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필요시 우리나라 산업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비관세 장벽을 조율하는 균형 정책이 요구

③ 협정·협력 주요 내용: TISA, TPP, EU DSM

- ICT 부문과의 관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협정 및 경제협력 내용 내 통신, 전자상거래 관련 특이사항을 분석범위로 제한
 - ICT 산업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TISA, 참여의사를 밝힌 TPP 및 한·일·중 DSM 논의가 벤치마킹 예정인 EU DSM
- 통신기기 관련 부문의 경우, ITA 적용에 따라 대부분 무관세로 통상 협정 진행에 따른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1

TISA

□ 중점 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규범화를 목표로 관련 시장 개방 폭을 넓히고 규범을 개선
 - 건설, 엔터테인먼트, 금융, 통신, 유통 등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 및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대효과) 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서비스 무역 부문에 있어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국제적인 서비스 무역의 성장 유인
 - 기존 WTO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완비된 법적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부분을 보완
 - 현재는 일부 WTO 회원국 대상의 논의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협상 참여국 확대 여부에 따라 WTO 수준의 협상으로 확대 가능

본 협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협정문(안)이 참여자에게만 한정적으로 공유되고 있어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2차 자료를 토대로 대략적 추진 내용 및 이슈를 점검

- 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EC 공개 자료 종합 정리
- b. 복수국간서비스협정 논의의 통상법적 의미, 아주법학, 2015. 8의 내용 참고

□ 추진 내용

- TISA 협정문(안)은 사실상 GATS에 기반하고 있으며, EU가 제안한 내용도 거의 GATS의 문안을 그대로 포함
 - 이에 반해 미국은 협정문(안)이 GATS와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 TISA 참여자가 RTA나, FTA를 맺을 경우, 해당 규정을 미래최혜국 대우(MFN-forward) 방식으로 TISA 참여국에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
 - 미국의 주장으로 TISA 규정을 일종의 경제통합 개념으로 인식, WTO 참여국 대상의 경제통합 의사가 높은 것으로 추정
 - EU는 경제통합을 염두에 둔 서비스통합 논의를 EU DSM 차원에서 진행할 의사가 강한 것으로 판단됨

[전자상거래 분야 논의]

- 정보의 이동 관련 규정
 - 미국 주도로, 서비스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안
 - 한·미FTA의 “국경 간 전자정보 이동의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 또는 유지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에 비해 강화된 것으로 평가
 - 사생활 보호(privacy) 관련 예외 규정이 없어 전통적으로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EU와 입장 대치
- 현지화 관련 요건 금지
 - 미국은 시장접근 약속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지 부품 또는 기술의 사용, 현지인 고용, 기업의 주재,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제안
 - 투자 등 다양한 이행요건금지 조항을 두고자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짐

[예외 및 공공서비스 분야]

- 문화, 시청각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분야 제외
 - EU는 전통적으로 문화 및 시청각서비스 분야를 정부 공공서비스 분야와 함께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제외
 - EU와 미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TISA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중점 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하며, 원칙적으로 예외가 없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추진
 - 기존 FTA와 달리 차세대 신규 무역이슈*를 포함하는 등 21세기형 무역협정의 표본을 지향
 - * 규제 정합성(coherence), 국영기업, 중소기업 등의 신규의제
- (기대효과)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하고, 혁신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빈곤 감소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 (포괄적 시장 접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줄여, 기업·근로자·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와 혜택 창출
 - (지역 간의 용이한 접근) 생산 및 공급 체인 개발과 지역 간의 경계 없는 무역을 가능하게 지원
 - (새로운 무역 이슈 해결)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국유 기업의 역할 등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여 혁신성·생산성·경쟁력 향상
 - (포괄적 무역 혜택) 모든 단계의 개발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이 경제 무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 (지역 통합 플랫폼)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플랫폼이 되며, 아·태 지역의 추가적인 경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

본 협정은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 의사만 밝힌 상태로, 기존 한·미FTA 및 한·중FTA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규정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

□ 추진 내용

- TPP 협상범위는 시장접근(market access) 관련 의제, 규범(rules) 관련 의제, 신규(New and cross-cutting) 관련 의제 분야로 구분
 - (시장접근) 상품·서비스 시장 접근 및 정부 조달, 농업분야 시장 접근
 - (규범)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 기술장벽, 해외투자, 경쟁정책, 노동, 환경 등
 - (신규 의제) 기업인 출입국, 국유기업, 중소기업 등

- 최종 30개 항목의 협정문이 채택되었으며, 의약품 특허 기간, 자동차 원산지 인정, 농업 개방 등의 주요 이슈들을 합의
 - (바이오 의약품 특허 기간) 미국(12년 특허)과 호주(5년 특허)의 대립에서, 미국이 양보하여 최소 5년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
 - (자동차 부품 원산지 인정 비율) 비관세 적용 자동차 부품의 TPP 역내 비중을 미국(60%)과 일본(40%) 주장에서 45%로 합의
 - (기존 환경조항 개선) 미국 정부가 다른 11개 협상국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TPP 내에 야생 동식물 밀거래 금지 등 강도 높은 환경보호 조항 포함

[서비스 분야 논의]

- (서비스의 국가간 거래)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유화에 대한 협의로 시장접근에 있어 정량적인 기준*이나 현지화 요건** 부여 금지
 - * 공급업체 수 혹은 거래건수 등
 - ** 지사나 계열사의 현지화 혹은 거주자 요건
- (금융서비스) 위기 상황에서는 금융시장 통제나 긴급조치를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가간 금융 및 신규 금융 서비스*의 기회 제공
 - * 자국에서 사업자가 허가받은 금융서비스의 경우 타 국가에 신규로 제공 가능
- (통신서비스) 해당 지역 주요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합리적인 조건과 적절한 시점에 상호접속 등 제공하고, 면허 부여 시 특정기술 차별 금지
- (전자상거래) 디코노미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이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정보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보장

[중소기업 및 기타 ICT 관련]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 대상 TPP 정보제공 웹 제작 및 TPP 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위원회 설립
- (기타 ICT 관련 분야) 환경 문제 관련한 강한 책무가 부여되었고, 사업간소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 등의 협의
 - 공해, 야생동물 보호, 해양환경 보호 등 환경과 관련한 강한 책무가 회원국들에게 부여

-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을 통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
- 생산 공정과 중간재간 글로벌 공급사슬의 유연성 강화, 무역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효율성 등을 협의

□ TPP 협정 내용 특이 사항

- 한·미FTA 및 한·중FTA는 구문의 구조, 범위 등에 있어 소폭 차이는 있으나, 큰 범위에서 특이 사항 없음
- TPP는 미국주도의 메가FTA 전략으로 국제 간 논란이 있는 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규정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반영
 - 예외적인 일부 경우를 제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방해하는 현지화 요구를 부인
- TPP의 국경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규정은 각국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기존 한·미FTA 및 한·중FTA에 비해 강화된 규정으로 평가되며, 향후 한국이 TPP에 후발 주자로 참여 시 수용해야 할 규정

3

EU DSM

□ 중점 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EU 내 디지털 시장의 규제를 폐지하고, 참여국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성하여 이동통신, 디지털서비스, 혁신 기업 활동 촉진
 - 다음 3대 목표 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전방위적 협의를 진행
 - ①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제고
 - ② 디지털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③ 디지털 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 (기대효과) 시장 범위 확대를 통해 EU 정체의 경제성장, 고용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

- 기존 상품, 인력, 서비스, 자본 등의 EU 역내 통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국별 다른 규제가 적용되던 환경을 통합
- 국경 없는 디지털 거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가 조기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제공
-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플랫폼 대비 경쟁 열위에 있는 EU 통신 산업의 경쟁력 회복

□ 추진 내용

- '15년 5월, 「디지털단일시장(DSM)전략」 발표를 통해 본격적인 통합 작업을 위한 활동 진행을 공표

[분야 1]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접근성 제고

표 17 EU 디지털단일시장 전략 목표 1 세부

목표	세부내용
배송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격, 고품질 국간 배달 서비스 촉진 ▶ 소비자 신뢰 구축 및, 효율적이고 저렴한 배송 제공을 통해 EU 국가 간 거래를 촉진 ▶ 온라인 판매 의사가 있는 기업의 62%가 배송비용으로 인한 애로를 토로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진행
전자상거래 용이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국경간 거래 촉진 ▶ 역내 타 국가에서 온라인 구매를 하는 소비자는 15%에 불과 ▶ 소비자 거래의 규칙을 통합하여 국경간 온라인 판매 기업을 양산하고 소비자 신뢰 증진
위성 및 케이블 지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 온라인 전송에까지 지침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는지 평가 ▶ 유럽내 방송서비스에 대한 국경간 액세스 강화 방안 모색
지리적 차단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근거없이 역내 특정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서비스를 역내 타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다른 가격이 설정된 지역내 스토어로 소비자를 재연결하는 행위 금지 → 의견 수렴 진행 중 (15.12.31기준)
저작권법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자와 소비자간 이익 균형을 보장하는 현대화된 저작권법 마련 ▶ 더많은 사람이 문화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지원하며, 예술가, 창작자들에 기회 제공 ▶ 향후 위원회(commission)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업적 침해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것
부가가치세 규칙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내 국경간 판매시 추가 1개국당 연간 부가가치세 준수비용이 €5000에 달하는 바, 단일 전자 등록 및 지불 등을 통한 일반적 부담 감소를 통해 소기업 활동 지원

※ <https://ec.europa.eu>, EC(European Commission)

-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차이를 없애고, 온라인 활동에 있어 국경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계획 예정

[분야 2] 디지털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초고속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통신망 제공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보를 위해 제반 규제 및 공정경쟁 상황 검토
 - 역내 국간 제도적 일관성을 높이고, 경쟁 및 서비스 신뢰를 저해하는 보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진행

표 18

EU 디지털단일시장 전략 목표 2 세부

목표	세부내용
목적에 맞는 통신 규칙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서비스, 응용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은 초고속의 보안성 높은 인프라 지원이 필요 ▶ 강하고, 경쟁력있으며 역동적인 통신환경 구성이 필요하나, 현재까지는 환경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 ▶ 역내 국가별 규제 제도의 차이로 인해 4G 성장이 저해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 점검 필요
21세기를 위한 미디어 프레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 부문의 새로운 기술, 비즈니스 모델, 주문형 서비스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활용 행태 등 환경이 급변 ▶ 국가별 다양한 규칙들에 대한 검토 진행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플랫폼, 앱스토어 및 가격비교 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정보 사용 및 플랫폼 간 이동성 제약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평가 ▶ 기타 인터넷 상 불법콘텐츠 차단 방법 모색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신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이용자의 72%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데이터 보호규제 및 규칙, 사이버보안에 대한 법 검토를 통한 우려 해소

※ <https://ec.europa.eu>, EC(European Commission)

[분야 3] 디지털 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표 19

EU 디지털단일시장 전략 목표 3 세부

목표	세부내용
산업의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산업 분야 신기술을 통합, 스마트 시스템 전환 관리
표준 및 상호운용성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신기술 지원 ▶ 역내 표준화 촉진을 통해, IoT,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분야의 표준 활동 강화
다량의 데이터경제 및 클라우드 컴퓨팅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는 디지털화를 위한 촉매 ▶ 단, 소유권, 데이터보호, 표준화 등의 문제 선결이 필요한 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사업 등을 시행
전자서비스 및 개선된 디지털 기술의 혜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혜택 강화

※ <https://ec.europa.eu>, EC(European Commission)

-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역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 '16년 추진 계획

- 소비자 보호, 정보보호, 보안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보장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추진될 것
- 이러한 전략은 디지털 시장 관련 EU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s)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회원국 간 이견 조정 필요
- 과거의 전략과는 달리, 연도별 단기 실천전략 위주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논의 진척 정도가 가시화될 것

표 20

EU DSM 추진내역 및 '16년 추진계획

기간	추진 내용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및 기업을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국경간 거래 계약규칙 입법 제안 ▶ 온라인 상품거래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자상거래 경쟁 환경 검토 ▶ 부당한 지리적 차단 해결을 위한 입법제안서 준비 예비 검토 ▶ 저작권 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콘텐츠 포함, 인터넷 내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종합 분석 ▶ 우선적인 ICT 표준 계획 채택 및 유럽 공공서비스를 위한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확장 채택
2015-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 및 케이블지침 검토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보호 협력에 대한 규제 검토 ▶ 국별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한 입법 제안 ▶ 택배 배송 분야 관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통신규칙 및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개혁을 위한 입법 제안 ▶ 사이버 보안 계약을 위한 민관 파트너쉽 구축 ▶ 전자개인정보보호지침 검토 (e-Privacy Dir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소유권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관한 검토진행 ▶ 'Once-Only' 원칙 하에 사업자 간 의무접속을 포함한 새로운 전자정부 조치계획 마련

□ EU DSM 전략의 의의

- 본 전략은 일반적인 통상협정 논의가 아닌 이미 경제통합 단계인 EU 역내국간 논의로 접근법에 차이
 - 역내 국간 이견 조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됨
- 다만, 본 DSM 논의는 EU 상대 통상 협정 시, 통신, 전자상거래 등 분야 논의와도 공통부문의 논리적 동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
 - 한·일·중 DSM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속적인 검토 필요

V.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ICT 정책수립 고려사항

①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ICT 정책 방향

- 대외 개방이 전제된 디코노미의 헤게모니 경쟁 심화에 따라 거시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ICT 정책 수립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ICT가 범용화되면서, 디코노미 선점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으로 인식
 -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단기 이슈 대응이 아닌, 중장기 전략 수립 시급
- 개방형 디코노미 대응 및 경제·통상 제반에 내재된 위험 요인 축소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

그림 9 | 거시환경 주요 변화



- (개방형 디코노미 선결이슈) ①시장확대, ②효율화 및 ③차별화를 통한 新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디지털접근성 제고 규범 개선, 제조업 혁신, 핵심자원인 정보의 배타적 확보 및 시장참여자 이해관계 상충 조율
-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검토이슈)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고려한 주력 산업 구조 개선 및 기존 중점산업 효율화 진행
 - 고부가가치 영역 중심 주력 新산업 육성, 교역 상대 다양화 및 품목 구조 다변화 시행

- (통상환경 대응 이슈) 개방형 디코노미를 통한 성장력 확보의 기반이 되므로, 개방 효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통상협정은 관세인하·폐지를 통한 교역 증진 뿐 아니라, 성장 정체인 각국 수요의 실질적 확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협력
 - 경제블록화 및 교차협정심화, 역학관계 변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및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를 고려한 시의적절한 정책 도입 진행
- (소결) 現 ICT 산업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나, 정책 방향 수립 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제언함
 - (1) 개방형 디코노미 기반 마련
 - (2) 정보/고부가가치 기반 산업구조 혁신
 - (3) 글로벌 규범 확립 지원

② 정책(안) 및 기대효과

1. 개방형 디코노미 기반 마련

□ 디지털접근성 제고를 위한 규범 개선

-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한 통신 관련 법, 저작권법, 정보보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관 산업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인 제거
 - ICT 산업이 범용화되어 자동차, 로봇, 금융 등 다양한 新산업이 창출되고 있으므로 우리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저는 확보하되,
 - 새로운 사업모델이 성공하고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우선 항목 및 개선에 따른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선제적 검토 진행
- (효과) 온·오프라인 간 차이를 최소화 하고, 국가 간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수요처 확보
 - 물리적·공간적 장벽이 없는 범세계적인 시장 확보 가능
 - 혁신적 기업, 서비스가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성장 기조 탈피 기반 확보

2. 정보/고부가가치 기반 산업구조 혁신

□ 정보확보 전략 수립 지원

- ICBM이 디코노미 경제의 핵심 융합 동인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이 혁신과 성장을 주도
 - 초연결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연결성 확장 및 이에 따른 데이터 활용 산업이 주목받고 있어 데이터 가치 및 활용에 대한 관심 고조
- 글로벌 기업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콘텐츠 산업 등 데이터 창출 시장에 대한 보호 정책과 함께 시장 주도 노력 전개
 - 구글, 애플 등 몇몇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도적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은 없는 가운데 차별화된 데이터 확보 경쟁 심화
- 데이터 확보 및 확보 이후, 분석 및 응용을 위한 빅데이터,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사업 육성 촉진 정책 마련
 - ICBM 분야가 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으나, 현행 R&D 및 관련 지원 정책이 단기·과편화된 지원 구조를 가져 성과 창출에 한계
 -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전제로, 데이터 확보 분야에 대한 성과 추적형 중·장기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 및 지원
- (효과) 일관성, 추진력이 담보된 정보 확보 전략 시행으로, 개방형 디코노미 시대 글로벌 헤게모니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
 - 통상 정책에서 데이터 센터는 자국에 두고, 원격지에서 글로벌 정보 확보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
 - 특히 고부가가치 영역의 경쟁우위를 선점한 선진국 중심의 요구가 거센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

□ ICT산업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 향후 제조 및 생산 중심 대외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 가치사슬 고도화는 필연적
 - 리쇼어링 및 선진국 제조업 효율화 진행 이후 산업계가 직면할 경쟁 환경은 현재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및 경쟁수준 이상일 것

- 확대일로인 통상 정책의 효과가 더해져, 무한 경쟁 환경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조 중심의 ICT 산업 구조 개선 시급
- ICT 분야와 융합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BM 및 인공지능 등 데이터 분석 처리 관련 분야 집중육성
 - 데이터 관련 기술은 모든 산업에 범용화 되어 비용절감 및 성능향상, 新산업 창출 가능
 - 선진국과의 기반기술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기반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 기반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특화된 활용 분야를 선제 발굴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공급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ICT 융합을 통한 가치사슬 고도화 추진
 - ICT 서비스 R&D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소싱 등의 방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서비스 R&D는 가시적인 성과 미흡 등의 이유로 소강 상태로(KISTEP, 2014.8), 현재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R&D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전경련, 2015.12)
 - 저부가가치 영역분야는 ICT 기술의 활용 및 융합으로 생산성을 향상* 하거나 부가가치를 고도화**하는 기술 개발 및 보급
 - * 공급망 관리에 IoT를 활용하거나, 제조업에 ICT를 접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 ** IC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효과) 선진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을 통한 자급률 향상, 중국 내수화 전략으로의 정책 변화에 따른 제조업 부문 경쟁 심화에 대응
 - 선진국은 제조업이 고용 창출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제조업 중심의 첨단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확산 정책 시행
 - 중국 등 거대 무역국 역시 내수 중심의 산업정책을 펼치며, 내실을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통적 교역 구조 변화

□ 정보기술 R&D 추진 전략 및 정책 재정비

- 개방형 디코노미 경제 시대를 선도할 기술 영역으로, 세계는 지능정보(인공지능)기술과 초연결기술에 주목
 - 인간수준의 학습, 추리, 지각 등이 가능한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서비스 주목
 - * Google은 스타트업 딥마인드(DeepMind)를 약 6억 달러에 인수('14), 바이두는 인공지능 연구에 향후 5년간 3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 인공지능 관련 매출액이 '15년 2억 250만 달러에서'20년 41억 4,470만 달러 규모로 증가 예상(Tractica, 2015)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주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
 - 인터넷 연결사물이 점차 확대되면서 초연결 기기·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초연결시대를 준비 중
 - * Cisco는 2020년까지 25억명, 370억개 사물 연결, 2030년까지 500억개의 사물들이 연결될 것으로 예측
- 개방형 디코노미의 핵심인 '정보'의 고부가가치화, 범용활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인공지능 등 범용서비스 중심 R&D 추진 강화
 - 지능정보기술과 초연결기술을 소산업시스템(의료, 금융, 교육, 에너지, 자동차, 제조, 전통산업)에 내재화하여 재설계*
 - * 지능정보기술의 강력한 제품·서비스 종속성은 산업의 본질을 바꾸고 적응력 실패는 식민지화를 초래하므로 국가 생존 측면에서 미래 대비가 필수
 - 지능정보·초연결기술이 타 기술영역과 결합하여 탄생할 미래 新산업의 핵심 생태계인 '정보' 기반 선도 구축 지원
 - 산업 변혁 및 新산업 발굴 기반 마련을 위한 유관 정책 재정비*
 - * 예) 지능정보기술이 기계, 전자 등과 결합되어 제품화되는 지능형 로봇 등의 영역 중점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지원 등
- (효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자주권 확보 기반 마련을 통한 미래 新산업 핵심 생태계 선도 구축
 - 선도 기술영역인 지능정보(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내실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영역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3. 글로벌 규범 확립

□ ICT 통상정책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체계적 대응 지원

- 양자간FTA에서 메가FTA로 확대되며 교차를 거듭하다 통상협정의 복잡성이 임계점에 달할 경우 협정 간 점진적 통합이 예상
 - 메가FTA를 기준으로 협상국 범위가 비슷하고, 유사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협정 간 통합 논의가 전개될 수 있으며,
 - 국 간 이해관계 상충도에 따라 통합 방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복성 있는 협정에 참여 시 선행 협정과의 동조화 확보 필요
- 주요 교역대상국인 한·중·일 3국은 향후 DSM 관련 논의 전개 예정으로, 논의의 특성상 대부분의 통신·전자상거래 부문 포괄 가능
 - 경제협력, 다자주의 기반 ITA, TISA 등 통신·전자상거래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논의와 메가FTA 논의를 일관성 있게 대응할 필요
- (기기) ITA 협정을 기준으로 ICT 제품 및 부품의 무관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필요시 FTA 협정을 통한 보완 대응이 요구됨
 - ITA 협정을 통한 무관세 품목 확대로 수출 여건은 개선되나, 수입관세 역시 사라져 해당 분야 특정 무역장벽이 폐지된 효과
 - 경쟁 열위 국가의 경우 비관세무역장벽 관련 사항을 보다 강화할 수 있으며, 기술 및 가격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
 - ICT 기술 탑재기기 범주 확대 및 환경변화에 따른 품목변화 역시 예상되어 무관세 목록 확대 논의는 향후에도 지속
 - 경쟁수준, 영향력 등이 가늠되지 않는 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어, 무관세 범위, 무관세 이행기간 등에 대한 검토 진행 시 신중한 접근 필요
 - ICT융합 기기 등 新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전략 수립
- (서비스) 선진국 강점 분야로, ICT 융합서비스 및 정보 교류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개방이 요구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 필요
 - 과거, 신흥·개도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와 교류가 함께 논의되었으나, 디지털 경제 기반 서비스 교류는 인프라 투자 필요가 희박

- 신시장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자산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 없는 개방은 산업 기반 약화로 전개
-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어렵고 선진국↔신흥·개도국 간 격차가 큰 부문으로 지속적 관찰이 요구됨
- o 메가FTA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간 중복 협정이 늘고 있어 일관되고 전략적인 통상정책 추진 필요
 - 산업↔통상 이슈 간 연계성을 확보한 ICT 부문 종합적 통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체계적 대응 지원
- o (효과) 교차협정 증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통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효과 증진
 - 중장기 전략적 대처 방안을 연속성있게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개방에 따른 효익 극대화 가능

[참 고 문 헌]

국내자료

1. 기획재정부, 2016년 경제전망, 2015.12
2. 김기홍,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따른 시기구분에 대하여-웹 개념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 연구 제15권 제3호, 2014. 06. pp. 411-432.
3.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11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 2015.12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년사, ICT를 활용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것, 2016.1
5.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무역장벽보고서, 2014
6. 손상영·홍동표·박명호, 인터넷 경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00-32, 2000.12.
7. 전국경제인연합회,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2015.12
8. 한국무역협회, 2015년 수출입 평가 및 2016년 전망, 2015.11
9.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No.66, 2015.12
1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2015.11
1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5.10
12. 한국개발연구원, 2015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2015.12
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시대의 서비스R&D 활성화방안, 2014.8
14. LG 경제연구원, 2016년 경제전망, 2015.12
15. VIP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발언, 과학기술·ICT 기반 창조경제가 미래 성장 동력, 2016.1

국외자료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2015.3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Adjusting to Lower Commodity Prices, 2015.10
3. OECD, Economic Outlook No.98: Press Conference, 2015.11
4. OECD,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Industry Globalization, 2013

웹페이지

1.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2.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3. 한국은행 (<http://www.bok.or.kr/>)
4. K-stat 수출입 통계 (<http://stat.kita.net>)
5. EC(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
6.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https://ustr.gov/>)
7. UN statistics Division (<http://unstats.un.org/>)
8. WTO (<https://www.wto.org/>)

본 참고문헌 목록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인용자료는
본문 내에 별표 또는 주석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최선미	ETRI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경제연구본부 기술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email: sonia@etri.re.kr	Tel. 042-860-5183
심진보	ETRI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경제연구본부 기술정책연구실	실장
	email: jbsim@etri.re.kr	Tel. 042-860-6213
하영욱	ETRI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경제연구본부 기술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email: hahaa@etri.re.kr	Tel. 042-860-6173
노유나	ETRI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경제연구본부 기술정책연구실	연구원
	email: dearudong@etri.re.kr	Tel. 042-860-3844

글로벌 메가공동체 시대의 ICT 정책 - 개방형 디코노미 정책 이슈 및 방향 -

발행인 : 한 성 수

발행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경제연구본부

발행일 : 2016년 12월 15일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전화 : (042) 860-3874, 팩스 : (042) 860-6504

* 주의 : 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및 출판권을 침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